

사립대 10곳 중 7곳 감사 전담조직 없어… “사학불신 야기”

2020 국정감사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직·인사·예산업무 감사 부진
일부 대학은 지인을 감사로 선임
“사학비리, 폐교사태로 이어져”

국내 사립대 10곳 중 7곳은 내부 감사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립대의 내부 감사·견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교육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2018년 7월 기준으로 조사 대상 42곳 중 30곳이 내부 감사전담조직이 없었다”면서 “사립대 조직·인사·예산 업무 전반에 대한 대학감사는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12개 대학 가운데 연세대와 서강대는 학교 내 감사 전담 부서가 아예 없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경희대 등 규모가 큰 대학들도 감사부서나 감사실이 있긴 하지만 인력이 고작 최소 1명에서 4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3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뉴스스

윤 의원은 “자체 감사조직조차 없다는 것은 우리 사립대학들이 자체 혁신 노력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을 불러오고 결국 사학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내부 감사 조직이 있는 대학 중 일부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인감사로 선임해 내부 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인 감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추천 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안이 이 같은 문제에도 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윤 의원은 “일부 대학은 법인과 계열회사임원이 직·간접적 지인을 감사로 선임해 특정 인의 입맛에 맞게 감사가 진행된다고

의심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교협에서 감사인을 대학에 추천해 선임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규정상 법인 감사 중 한 명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학생 대표와 교수협의회 대표, 이사회 대표 등이 서로 모여서 다수결에 의해 선임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절차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방식과 어떻게 조화될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사학 비리’가 교육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폐교대학 17곳 중 13곳의 원인이 대학의 내부 ‘비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폐교한 17개 대학 중 13개 대학은 사학 비리가 원인”이라며 “폐교 대학에서 해고된 교직원이 1000명에 육박하는데 직장을 잃은 교직원에 대한 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예술대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건동대 ▲경북외대 ▲국제문화대학원대 ▲인제대학원대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 ▲동부산대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 ▲개혁신학교 ▲한민학교 등 폐교 대학 17곳 가운데 경북외대·대구외대·대구미래대·인제대학원대 등 4곳만 학생충원 어려움과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폐교했다. 나머지 13곳의 폐교 원인은 비리였다.

이에 대해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청산 과정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면서 “실제 청산 과정을 어떻게 지원할지, 체불임금 같은 경우 융자를 해야 하는데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 원리금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안을 교육부와 상의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h@metroseoul.co.kr

김범관 울산대 교수 목조건축대전 우수상



목조에 철물을 덧댄 중목 건축과 자연변화에 따라 건축물 색상이 변하는 환경 감응형 입체 패널을 개발해 주목을 끌었던 김범관 울산대 건

축학부 교수(사진)가 ‘2020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은 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건축 공모전으로 목조 건축의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고 친환경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한 대회다.

13일 울산대에 따르면, 계획, 준공 2개 부문 중 준공 부문에서 수상한 김 교수의 작품은 ‘아리주진’ 프로젝트로 중목 건축과 감응형 입체 패널을 적용한 목조 건축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역성과 함께 목조구조를 위한 기능성 디자인 외장재를 가미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 교수들 연구비 부정집행 행위 알고도 ‘쉬쉬’

교수 5명 10년간 인건비 16억 편취
한국연구재단, 약식판결 이후 인지

고려대가 생명과학대 교수들의 연구비 부정집행 행위가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한국연구재단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의 은폐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연구재단의 부실한 감사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려대 BK사업 인건비 편취 신고대응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려대가 연구비 부정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대 교수 연구비 편취금액·판결내용〉

직책	편취금액	벌금규모
前 총장	6500만원	500만원
前 산학협력단 부단장	3억6000만원	1500만원
前 산학협력단 단장	2억3000만원	1000만원
前 BK사업단 단장 A	1억9000만원	700만원
前 BK사업단 단장 B	8억600만원	3000만원

한국연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전 총장 및 전 산학협력단장 등 보직 교수 5명은 2007년부터 10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 수행 중 학생연구원 인건비 16억여원을 편취했다. 연구원이나 교수 명의의 공동관리 통장을 만든 후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방식이다.

이들 중 4명은 올해 3월 검찰의 약식 기소로 5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여원을 편취한 1명은 9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권인숙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이 같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은 4인 교수에 대한 약식판결 후 2개월이 지난 5

월 말”이라며 “그것도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보고가 아닌 공의제보를 통해서였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한국연구재단과 체결한 협약상 소속 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재단에 보고토록 돼 있음에도, 학교 측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고려대가 은폐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연구재단은 제보나 언론보도 등에 의존한 ‘특정감사’만을 진행하고 있고 선제적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교수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눈 먼 연구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실시간 쌍방향 수업 따라만 하세요”

서울시교육청
화상수업 도움자료 15종 보급



실시간 쌍방향수업 플랫폼 활용법 도움 영상 자료.
/서울시교육청

종을 각각 컴퓨터, 안드로이드, 아이오에스(iOS)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현진 기자

‘아임 도그너 캠페인’, 세계학자 주목

건국대 동물병원·현대차 공동 진행 국제응급수의학회 심포지엄서 발표



찾아가는 반려견 헌혈카

/건국대

건국대 동물병원과 현대자동차가 한국헌혈견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아임 도그너(I'M DOgNOR)’는 찾아가는 반려견 헌혈카’ 캠페인에 대한 운용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응급수의학회(IV ECCS) 심포지엄에서 발표돼 세계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건국대 동물병원 응급증환자의학과(발표 최희재 수의사)는 지난해 이어올 해에도 IVECCS에 연구 초록이 채택돼 발표를 진행했으며, 특히 올해는

/이현진 기자

한국외대 에스토니아 대사 초청 강연



한국외대 장모 네 EU센터와 EU 연구소는 오는 14일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이덕선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마르티 매타스(사진) 주한 에스토니아 대리대사가 참석해 강연을 펼친다.

/이현진 기자